

‘등록금 반환법’ 무용지물?… 대학 등록금 작년 수준 유지

등록금 심의 마친 대학 95% ‘동결’ 법안시행됐지만 강제성 없어 한계 원격수업 확대… 학생 환급 요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학생들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등록금 환급 요구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온라인 강의 20% 제한이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100%까지 가능해지면서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올해 등록금 동결 4년제 대학은 고려대와 경희대, 서울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천대 등 43개교이다. 이는 전체 193개교 중 등록금 심의를 마친 45개 대학의 95%로, 전체 대학에서는 22.3%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국립대 18개교, 사립대 25개교다.

두 곳은 인하를 결정했다. 한발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부 등록금을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시스

지난해 대비 0.47% 인하하기로 했다. 청주대도 0.45% 인하를 결정했다.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동결 대학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1.2%로 정해 공시했지만, 사실상 대학에 의미 없는 수치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법’ 마련…재난으로 학사 운영 차질 시 면제·감액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재난 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근거 규

정이 마련됐다. 학교 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등록금 반환법은 지난해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면서 대학과 갈등을 빚으며 추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교육의 질에 불만을 표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당시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 사항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결국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가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가 해당 예산을 등록금 반환 의지를 가진 대학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 대학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환급’ 강제성 없고 100% 온라인 강의 가능해져…갈등 지속 전망

등록금 반환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원격수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 비율을 지난해 일시적으로 푼 데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그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대학은 최대 100%까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반환법에서도 등록금 감면 또는 면제가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이를 거부하는 대학에 되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나 동결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2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조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교육 질은 떨어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매 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회의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상황 악화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펴낸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은 “사립대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 제한이 장시간 지속하면서 재정 결손이 누적돼 적절한 재정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에 대해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부족한 재원은 정부재정지원 확보, 발전기금 모금, 법인 적립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13.6만명 지급 부모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올해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입생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교육 기본소득으로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 관내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입학준비금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

(입학지원금 구매 범위)

구분	의류	스마트기기
구매 범위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태블릿PC(노트북 포함)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비고	교복 구매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등록된 제로페이 가맹점 방문해 구매 가능

/서울시교육청

는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학준비금으로 살 수 있는 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신청한 대상 학생에게 2월 중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

안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30만원씩 지급하면 약 416억원이 소요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 ETRI와 AI 분야 ‘맞손’

연구개발 협력, 인력 교류 등 MOU

서울과기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인공지능(AI) 분야 R&D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과기대 최병욱 창의융합대학장을 비롯해 박종열 인공지능융합학과장, ETRI 한동원 AI아카데미 교육위원장, 김진영 AI전문인력양성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ZOOM’을 통한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기술 등 R&



(왼쪽부터)박종열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 최병욱 창의융합대학장 학장, 김진영 ETRI AI전문인력양성실장, 김명준 ETRI 원장이 양기관 AI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D 협력 활성화 ▲교육, 연구인력, 기술 정보 등 상호 교류 ▲인공지능융합학과 재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캠퍼스타운조성단 ‘학생 마을 디자이너’ 모집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단은 오는 22일까지 ‘2021 학생 마을 디자이너’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 마을 디자이너 활동은 캠퍼스타운 일대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참가 대상은 커뮤니티 디자인에 관심 있는 대학생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이다.

학생마을디자이너로 선발되면 ▲워크숍 ▲발표 평가 ▲영상 촬영 및 SNS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정종화 삼육대 교수, 한국복지경영학회 회장 연임

삼육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사진)가 제10대 한국복지경영학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 1년이다.

한국복지경영학회는 지난 4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 교수를 9대에 이어 제10대 학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복지경영학회는 2011년 설립돼 사회적 경제와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방안 등 복지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산학연계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약 25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연 2회 춘·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학술지



연구 ▲커뮤니티 케어 전개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시설 경영 노하우 개발 ▲비영리 복지경영 해외 우수 사례 연구 등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박찬량 국민대 부총장, ‘교육부장관 표창’

산학협력 성과 공유·확산 공로 인정

대학 내 산학협력단장, 공동기원장 및 (㈜)국민대학교기술주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며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확산에 앞장섰던 박찬량 국민대 산학연구부총장(사진)이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국민대학교는 박찬량 산학연구부총장(LINC+사업단장)이 지난달 27일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 ‘2020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동계 포럼 및 총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박찬량 산학연구부총장은 LINC+사업단장, 산학협력단장, 공동기원장 및 (㈜)국민대학교기술주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인문사회·예술분야로 산학협력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화 기반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현진 기자